SmArt 동강대학교
나를 뛰어넘다
http://www.dkc.ac.kr 062-520-2555 동강대학교

광주 9/23℃ 목포 7/16℃ 여수 12/20℃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2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단기 4345년 (음력 3월 26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9210호 1판 2012년 4월 16일 월요일

불타는 영취산 광주·전남지역 낮 최고기온이 25도까지 치솟은 15일 여수 영취산에 진달래가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휴일을 맞아 산행에 나선 등산객들이 분홍빛 꽃물결속에서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구의회 폐지·구청장 관선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 개편안 의결

정부가 서울 및 광주를 비롯한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에선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는 서울 중구를 인근 구와 통합하는 등 10개 자치구를 없애는 내용도 담겨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13일 비공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치구 변경안과 과소 자치구 기준 설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 자치제도 변경안은 서울시의 경우 구청장만 민선으로 선출하고 구의회는 모두 폐지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또 광주와 부산·대전·울산·인천·대구광역시의 경우 구청장은 정부가 관선으로 임명하고, 구의회는 모두 없애는 내용이다. 이 안은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개편추진위는 이와 함께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구의 평균보다 크게 낮은 10개 자치단체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자치구 평균 인구의 30%가 안되는 구가 대상이다. 통폐합 대상으로는 서울 중구(인구 13만3193명), 부산 중구(4만8686명)·강서구(6만4733명), 대구 중구(7만6600명), 인천 동구(7만8692명) 등이 꼽히고 있다.

추진위 민간위원인 박승주 광주발전연구원장은 "구의회를 폐지하고 구청장을 관선으로 임명토록 한 이유는 구에 대한 감독권을 시의회에 부여함으로써 시정과 구정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치약화의 개념이 아니라 자치구의 기능을 재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대통령 추천 6명, 국회의장 추천 10명, 관련 협의체 8명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개편안을 오는 6월30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대통령과 국회는 이 안을 바탕으로 법을 개정하고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개편을 확정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부패 공직자 '원-아웃제' 선언한 광주시

총인비리 20여명 징계폭 고심

광주시가 총인저감시설 입찰 비리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의 처리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공무원들이 역대 최대규모인데다, 이달부터는 단 한 번이라도 금품을 수수할 경우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원-아웃(one-out)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자칫 수십 명의 공무원이 한꺼번에 옷을 벗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일사건 역대 최대규모 무더기 퇴출 사태 올 수도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광주시 소속 간부공무원 6명에 대해 '총인시설 입찰참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수사개시통보서를 시에 보내왔다. 검찰은 또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여행과 식사를 비롯해 향응을 제공받은 10여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고 있으며, 수사를 마무리한 뒤 광주시에 범죄사실을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로서는 단일 사건에 이처럼 많은 공직자가 연루돼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처리 시점과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는 직무와 관련해 단 한 번이라도 100만원 이상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파면이나 해임을 통해 공직에서 퇴출한다는 '원-아웃'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이 제도의 적용 여부를 놓고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광주시는 일단, 모든 법은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총인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원-아웃'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총인비리가 저질러진 시점은 지난해 중반으로, '원-아웃' 제도 시행 이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부패의 고리를 끊는다며 '원-아웃' 제도를 도입해놓고선 막상 총인비리 연루 공무원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난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총인비리 연루 공무원에 대한 '원-아웃' 제도 도입 가능 여부를 법제처 등에 문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그러나 이번 총인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여느 때보다 강도높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열리게 될 인사위원회에서는 무조건 퇴출은 아니더라도 '원-아웃'제도를 의식해 종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수준의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직자가 파면되면 퇴직금은 절반, 연금은 자신이 납입한 금액만 받게 되며, 해임되면 연금은 모두 받지만 퇴직금은 4분의 3만 수령할 수 있게 된다"며 "개인의 불이익이 워낙 크겠지만, 비리 공무원들은 법원의 판결과 시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엄정한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문성근 대행" "비대위 구성"

민주 '포스트 한명숙' 임시 체제 구성 갈등

4·11 총선에서 참패한 민주통합당이 한명숙 대표의 사퇴에 따른 임시 지도부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4일 밤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관련기사 3면〉

박용진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어제 최고위에서는 문성근 대표대행 체제를 확정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일부 참석자들이 비대위 의견을 냈지만 선출직인 김부겸 최고위원이 참석하지 않아 결론을 오늘로 미룬 것"이라며 "오늘 지도체제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문 대행 등 친노(친노무현) 측 등은 당헌·당규에 따라 문 대행 체제로 다음 지도부를 선출할 임시전국대의원대회(임시전대)를 준비하자는 입장인 반면 박지원 최고위원 등은 지도부 일괄사퇴 후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당헌 25조는 대표 궐위시 2개월 이내에 임시전대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 또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다수득표자, 원내대표 순으로 대표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차기 지도체제 형태는 물론 다음 임시전대 일정, 원내대표 선출 일정 등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대선주자를 8월 이전에는 정해야 하는 만큼 다음달 말이나 6월초에는 임시전대를 소집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친노중심의 임시지도부 구성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 이번 총선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친노중심의 당 운영이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당권에 욕심을 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반성할 사람들이 차기 지도부 선출 때까지 두 달간 국민 앞에 나서면 국민이 감동을 받겠느냐"며 "당 지도부가 모두 물러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 대행 찬성 측은 "당헌에 따라 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열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데 대해 무한책임을 지겠다"며 대표직을 사퇴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